

“국가예산·특자도 등 현안 해결 총력 경주”

김관영 도지사, 삽감된 예산 복원 위해 설득활동 배가… 실국별 활동 독려
도의회와 소통 강화·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사전준비·수능 방역지원도

김관영 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실국장에게 전북 관련 국기예산 회복, 특별자치도법 개정, 남원의전원법 통과 등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소통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삽감된 국기예산의 회복을 위해 부처와 기재부 등에 설명 활동은 강화해서 예산 증액의 결실을 거두자며 실국별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더불어 이후 실행도 중요하면서 전북형 특례가 마련되면 관련 지원과 조례 마련, 용역, 기본구상 등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



비율을 철저히 하 고, 상임위별 의 원들께 도정질 문·5분발언 등 의정발언 추진상황을 미리 설명 하는 등 도의회 의 소통을 강 화해달라고 밝혔다.

다.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관련해 지역활 력터운과 지역특성설명기 공모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추후에도 부처 공 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일 수능 당일은 도내 수험생 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능 시험 종료 후 예상되는 인파밀집 상황에도 선제 적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 했다.

앞으로 행정에도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채용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활용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에 힘쓰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결의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결의되고 있다.

(시진=뉴스 제공)

“전북도 산하기관 인권경영 이해도 부족”

김이재 도의원, 인권담당관 소관 행감서 “도입한지 5년 훌렸으나 인지도 40.7% 불과
도 차원서도 여러 대책 마련중이나 현재 인식 정도로는 요원… 단순 교육 넘은 대책 필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더불어민주당, 전주4) 위원장이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 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그리고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자료를 보면 먼저 직원 대상 설



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 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 40.7%만이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직원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는 데’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

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훌렸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인권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며 도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식 정도로는 요원할 일일 것”이라며 “인권경영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인권지킴이단 정책제안 기능 재활성화해야”

박정규 도의원, “20건 중 대부분이 민원성… 세미나 정례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더불어민주당, 임실) 의원이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정책제안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현재 도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각종 치별행위의 제보 등을 위한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적구성을 인권강사, 사회복지시설인권지킴이 등 150명이 참



여한다. 올해 운 영 성과를 보면 정책제안, 침해제 보 등 24건(정책 제안 20, 침해제 보 2, 치별제보 2)이다.

박정규 의원에 따르면 인권담당 관이 올해 인권지킴이단 활동 성과로 제출한 내용 중 정책제안 사항을 보면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저녁에 해줄 것 △시군 영상회의 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 △인권지킴이단 모임 시 식비 또는 장소를 지원해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박정규 의원은 “현재 인권지킴이단의 정책 제안은 단순 민원성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제안이야 말로 인권지킴이단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능이나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제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정례화하거나 교육을 병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제안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